

대상 [유학생부]

일본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책으로 교육세 도입 등의 독창적인 제안을 전개. 논문으로서의 간결성과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NRI 학생 소논문 콘테스트 2013
세계를 향한 미래 제안
당신이 생각하는 "두근두근 사회"를
그려 주세요
입상 작품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위한 교육세 도입과 교육 시스템의 개선

오사카대학 대학원 기초공학연구과 석사과정 2년

정 상교

교육에 의해 정해져 버리는 '인생의 각본'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 경기의 매력은 시합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는 선수들에게 있다. 선수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관전자의 감동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편향 없는 공정한 판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활기 넘치며 구성원 모두가 높은 모티베이션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교육 기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사회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세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가계 소득 수준의 차이, 공립/사립학교의 교육 수준의 차이, 학원 등 사교육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의 차이 등, 같은 일본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 지라도 교육 기회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교육약자는 초기 단계부터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교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쪽 또한 현상유지에 안주하게 되어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교육격차에 의해 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인생의 각본'이 정해지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활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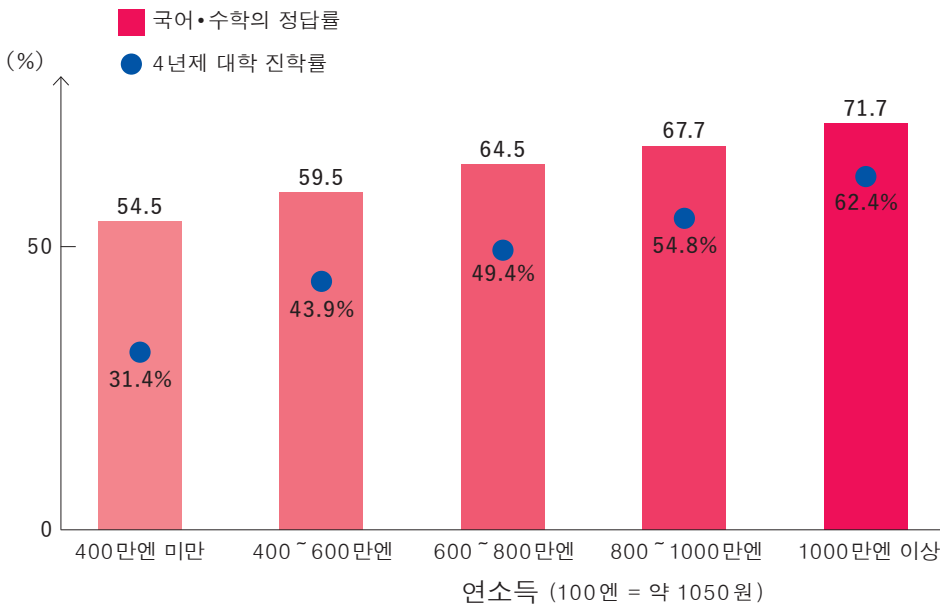
사회가 활기 넘치며, 구성원 모두가 미래에 대한 '두근거림'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세의 도입을 통한 교육재정의 강화와 교육약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한다.

교육세의 도입과 그 당위성

일본은 교육에 관련하여 사비부담률이 높고, GDP에서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공공재정의 비율이 낮은 나라이다 (그림2).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는 가계상황이 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약자에게도 가능한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련된 재원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①증세로 충당하고, ②증세분을 포함한 교

그림1 부모의 소득과 학력/대학진학률의 관계



출처) 국어·수학의 정답률: 국립교육정책연구소 「2007·2008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 추가분석 보고서」
4년제 대학 진학률: 도쿄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대학경영·정책연구센터 「고등학생의 진로 추적조사 제1차 보고서」 (2007년)

육예산 전체를 ‘교육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세 도입의 사회적 의의는 가정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던 교육문제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있다.

교육세 도입에 대해서는 사치품에 대한 과세 혹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적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접근을 고려 할 수 있으나, 필자는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교육세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적용준비단계로 소득세에서 교육예산 분을 교육세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증세하면서, 그 증세분을 교육세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0~19세의 학생에게 한 달에 1만엔 정도의 지원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일본의 소득세수 총액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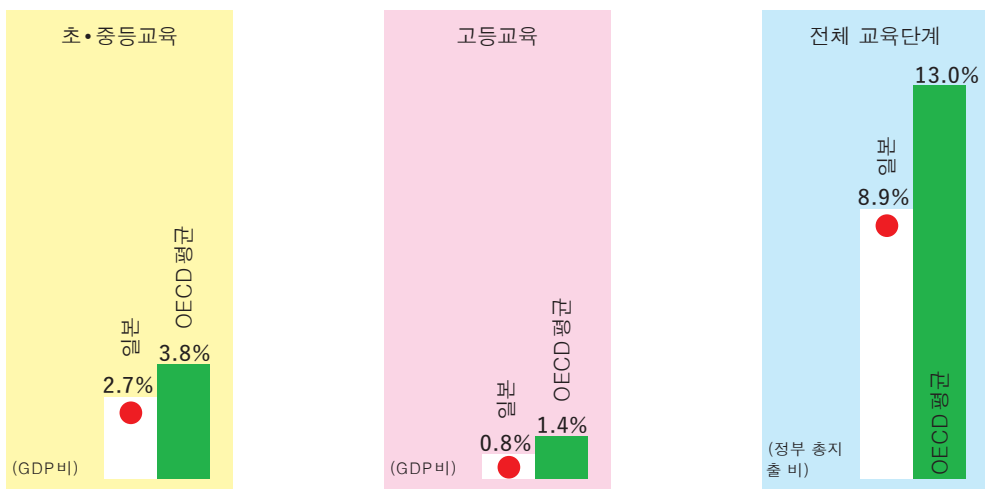
13.5조엔의 20%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 이 증세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 할 경우, 연수입 500만엔, 과세대상액 200만엔의 소득자의 경우, 1년엔 2만엔 정도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실행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¹⁾.

또한 교육세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

교육세의 도입은 재원을 확대하여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이 ‘교육세’ 라는 명목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유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림2 공공재정의 교육지출 비율



일본의 교육투자는 국가규모, 정부규모에 비해 적은 편
출처) OECD「도표로 보는 교육 2012」

면 조세저항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비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조세정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연금과 같은 많은 복지제도는 미래세대의 세 부담으로 성립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래세대의 세 부담이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더욱 가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세를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은 고령자에 대한 세금투자와 짝을 맞추게 되어, 인구변화에 의해 발생한 조세의 세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세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의 부담을 높여,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미래세대의 세수에 대한 기여가 적은 사람에게 세 부담을 중과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교육세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3) 유도효과

교육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징수되기 때문에 일정시기에 집중하는 교육비용의 피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자녀부양의 체감부담의 경감을 통한 출산 장려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독신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교육

세는 실질적으로 독신세대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신인구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저출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의 개선

1. 초·중등교육

일본의 초·중등교육은 국공립/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교육기관이 존재하여 학생의 선택에 높은 자유도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약자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자유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약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학교에서의 교육비율의 증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과거와 비교하여 가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약화시켰다. 한편, 다양성과 자주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유도리 교육(주입식 학습 축소 교육)’이 도입되어 학교에서의 교육량도 감소하였다.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의 증가가 오히려 초·중등교육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킨 것에 있다. 학교선택의 자유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좋은 사립학교’와 ‘붕괴한 공립

학교' 같은 학교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가정의 경제능력이 좋지 않아 학교선택의 범위가 좁은 교육약자는 더욱 더 교육환경이 나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립교육기관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 ①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높임.
- ② 방과후 혹은 방학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높임과 동시에,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
- ③ 교원확보를 통한 소수인원학급의 실현.
- ④ 교원평가제에 따른 인센티브·재교육 시스템을 도입.

을 제안한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적용하여 성과를 낸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공립교육의 강화를 위해, 실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자유도를 높인 차터스쿨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생활지도와 교육강도를 높인 데모크래시 프랩스쿨에서는 빈곤층이나 유색인종과 같은 교육약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 사교육비용의 보조

일본에서는 방과후에 사교육기관에서 스포츠나 예술활동, 보습 등의 필요에 따른 교

육을 실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교육기관은 교육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일률적인 공교육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으며, 교육비용도 세대수입에 따라 큰 편차를 지니고 있다²⁾. 이는 세대수입에 따라 사교육에서도 교육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한의 사교육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사교육기관을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에 등록시킨 후, 이러한 기관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연간 사용가능 금액을 정하여 배부하는 것이다. 보습이나 예체능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이나 휴일캠프 등에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없었던 교육약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고등교육

여기서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문제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자기부담률 경감과, 학문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1) 자기부담률의 경감

일본은 고등교육에서 자기부담률이 높아 가계상황이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³⁾.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학포기를 막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자기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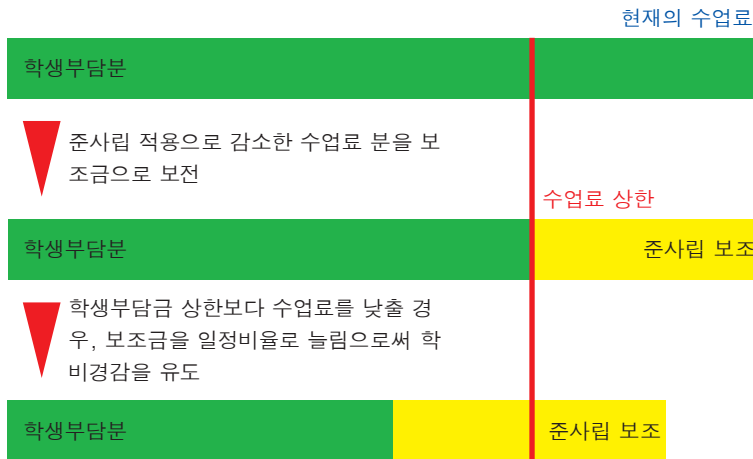
현재 일본에서는 대학생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JASSO를 필두로 하는 반환식 장학금 제도(한국의 학자금 대출과 유사)가 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수업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장학금만으로 대학에 다니는 것이 어렵고, 부모에게 일정액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반환식이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함과 동시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최고금액인 월 12만엔을 4년간 수급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576만엔의 빚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업료를 낮추는 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국공립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10만엔 이하로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색채가 강한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 수업료는 연간 100~500유로(15만원 ~ 70만원) 정도로, 수업료 부담이 경미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후원률이나 교원 확보율과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통과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선별하여 등록금 상한을 정하는 ‘준사립’ 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준사립대학에는 정부규제의 달성도를 연동시켜 다른 사립학교에 비하여 다액의 정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재학생의

그림3 준사립제의 원리



일인당 수업료는 감소하지만, 학생유치를 촉진시킴으로써 대학측도 이익을 얻음.

체감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다(그림3).

또, 수업료의 인하를 유학생에게도 적용할 경우, 외국인의 일본유학을 촉진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2) 직업교육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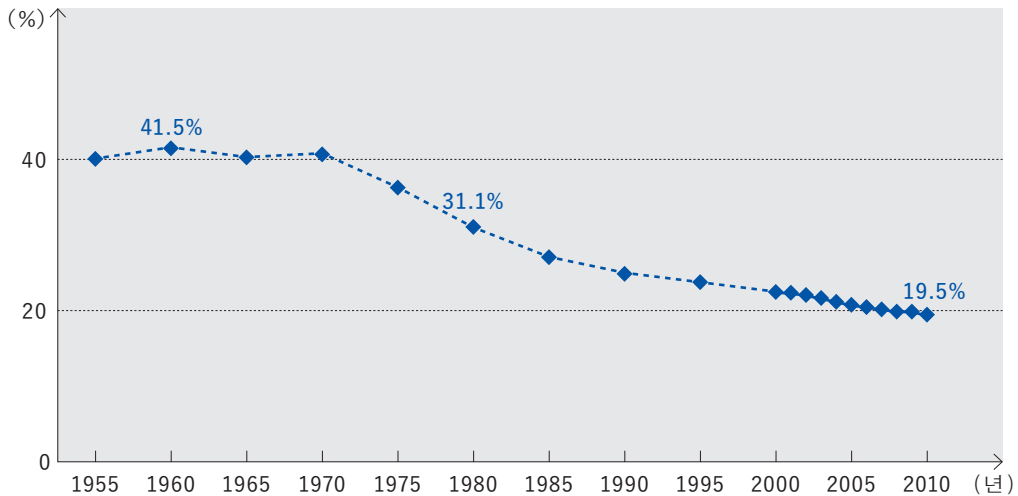
대학진학자의 지원을 늘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편중 없는 교육자원을 투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직을 원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직업학과 출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직업학과에 진학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그림4), 많은 대학생들

이 ‘대졸학력’만을 위하여 진학하고 있다4). 이러한 직업학과 기피의 이유에는 사회적 인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량기업에 대한 직업학과 출신 채용 장려나 우수한 학생이 모이는 명문 직업고교의 육성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지닌 직업학과 출신 인재가 ‘좋은 직장’에서 환영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인식변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한 산학연계 커리큘럼의 강화 혹은 20인 이하의 소수인원학급을 통한 실무교육의 강화를 제안한다. 졸업 후 바로 활약 할 수 있는, 산업현장에서 인기가 높은 인재의 육성은 취업률의 증가와 연결되므로, 직업고교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림4 직업학과 학생수의 비율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마지막으로 중학생에게 각종 직업에 대한 소개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대학' 외의 진로를 제안함으로써, 고등학교의 직업학과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직업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다채로운 특전으로 우수학생을 모집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양질의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교육에 관련하여 한국과 닮은 점이 많은 일본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 낼 것이라고 예상된다.

난관을 뛰어넘어, 사회적 합의를

지금까지의 일본사회는 교육을 비교적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원하는 제도로 변화시킴으로써, 교육에 관한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세 도입에 따른 교육 시스템의 개선의 골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은 학생들이 각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교육을 받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재능이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져, 사회의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 등, 교육 시스템의 개혁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두근 거림'과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시도가 꼭 필요하다.

주

- 1) 재무성 「일본의 재무관계자료」 2012년, 총무성 통계국 「인구추계」 2011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
- 2) benesse 교육종합연구소 「학교외 교육활동에 관한 조사 2013」 2013년
- 3) 문부교육성 「교육투자의 현상에 관한 고찰」 2012년
- 4) 일본사립대학연맹 『사립대학 학생생활백서 2011』 2011년

참고문헌

- (그림1) 국립교육정책연구소 「2007·2008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 추가분석보고서」 도쿄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대학경영·정책 연구센터 『고등학생의 진로 추적조사 제 1차 보고서』 2007년
- (그림2) OECD 「도표로 보는 교육 2012」
- (그림4)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